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음 10월 18일) 제194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폐쇄 방침 서남대, 희생 기회 오나

정상화 계획서 교육부 제출키로

폐쇄 방침이 내려진 서남대학교(남원 소재)에 희생 기회가 주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서남대 등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사전에 공지한 행정예고(12월7일) 전까지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서남대 인수전에는 부영건설과 부산 온종합병원 등이 뛰어들었고,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온종합병원 한 곳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남대측은 오는 5일 또는 6일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뒤 "행정예고를 중단하고 정상화계획서를 검토하라"며 강력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 폐교 결정 반발
교수·교직원들도
학교 살리기 총력
"대학 정상화 위해
50억원의 돈 낼 것
방식은 아직 미결정"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서남대 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에 오는 7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후 법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2월중 최종 대학폐쇄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학교 정상화 계획서 제출과 함께 교수와 교직원 등도 이른바 '학교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교수와 교직원들은 교육부의 폐교 결정을 비판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상태이며, 약 50억원을 기부체납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사직서는 인수가관이 학교 구조조정을 해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이며 교수 151명 중 124명 가량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직원 대부분도 이를 동의했다. 이와함께 학교 정상화를 위해 50억원 가량의 돈을 낼 뜻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남대교수협의회 김철승 회장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 학교 전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어떤 방식으로 50억원을 낼 지는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구성원들이 돈을 모아서 하던지, 월급에서 내던지, 체불임금을 기

부하던지 등 여러 안은 나와 있는 상태"고 말했다. 이어 "온종합병원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약 2000억원 투자 계획이 있고, 전북도와 남원시, 남원시의회 등과 대학 상생 협약을 하려고 노력중이다"며 "우선 행정예고 기간 전에 교육부에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뒤,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정치권에서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남대는 설립자 비리, 파행 운영 등으로 논란을 빚었고 현재 폐쇄 위기에 있는 상태다. /남원=유영철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왼쪽 세번째)이 4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17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주거복지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최우수기관으로 전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대통령 표창을 수상받고 있다.

전주형 서민층 주거 안정망 '큰 상 받았다'

시,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서 대통령 표창 수상... 지자체 최우수기관과 신설·민간 협력 사회주택 사업 추진 우수사례로

전주시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안정망 일등도시로 인정받았다. <관련기사 4면> 시는 4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17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주거복지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주거복지 분야의 유일한 행사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시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주거복지 전담조직인 '주거복지과'를 신설하고, 민·관 협력을 바

탕으로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임차인과의 협력적 대응 및 지원 등 민선6기 전주시의 주거복지 관련 정책과 성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는 단 한 사람의 시민도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꿈꾸고 있다. 집 없는 실업으로 힘겨워하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며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응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들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법인세 과표 3000억으로 상향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소득세 정부안 유지
5억원 초과 세율 42%로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2조586억원으로 합의
2019년 이후 교육자치단체
대상 누리예산 지원
내년 예산액 초과 불가

여야는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인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정부·여당이 기존인 2000억원에서 한 발 물러나 3000억원으로 상향하며 타협점을 찾았다. 여야 3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원외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법인세는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올렸다.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1000억원 이

상 증액키로 했다. 단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합의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 소득세는 정부안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고,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세율도 40%에서 42%로 높인다.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결정했다. 단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2018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018년 수준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집행단가 인상은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하며 지원요소 산정시 지원대상 아동의 수는 각 년도 지원대상 아동수를 적용토록 한다는 누리과정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년별로 단계적 도입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토록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태권도 교본 개정증보 머리 맞댄다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8-9일 태권도원서 전문가 워크숍
교본 구성안과 함께 총론·품새·겨루기 등 토의·발표

대한민국 국기원 태권도 교본을 편찬하기 위해 태권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국기원 태권도연구소는 오는 8~9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2017 태권도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객원 연구원과 세계태권도연수원 실기강사, 국기원 기술심의회 위원을 비롯해 태권도 연구자, 일선 지도자 등 150여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태권도 교본의 구성(안)과 같이 총론, 밀바탕, 품새, 겨루기, 호신술, 격파, 시범 등 총 7개

분과로 편성해 세부 토의와 발표를 한다. 분과별 토의와 별개로 태권도 교본 편찬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유토의와 종합토론도 한다. 연구소는 워크숍을 통해 태권도 교본 편찬 방향과 태권도 기술, 관련 학문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실행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기원 태권도 교본은 1987년 공식 발간된 후 2005년 개정, 증보판이 나왔다. /뉴시스

매일 INDEX

3면 -전북도 삼락농정 미흡 5면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 없앤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살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